<훈련결과보고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 연구

2022년 3월

소속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 손 은 삼

< 훈련 개요 >

□ 훈련기관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훈련분야 : 경영학(국제경영전공) 석사학위과정

□ 훈련기간 : 2019.9 ~ 2022. 2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3.

순 서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주요 개념 ·····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 차별성 ····· 12

제2장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 15

제1절 미중 무역전쟁 ····· 15

제2절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 21

제3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5

제4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 29

제5절 요소수 공급 대란 ····· 32

제3장 해외 주요국 무역정책 현황 ····· 35

제1절 미국의 무역정책 현황 ····· 35

순 서

제2절 중국의 무역정책 현황 ····· 36

제3절 EU의 무역정책 현황 ····· 38

제4장 정부의 대응사례 ····· 40

제1절 미중 무역전쟁 ····· 40

제2절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 41

제3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44

제4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 46

제5절 요소수 공급 대란 ····· 48

제5장 무역정책 방향 제시 ····· 49

<참고 문헌> ····· 53

1) 국내문헌 ····· 53

2) 인터넷 ····· 54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 기술 수준이 낮은 조건 하에서 공업,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았다. 경제성장단계에서 원료의 조달, 완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내수보다는 무역의 높은 비중은 필수불가결하였으며, 이로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국가 주도의 무역정책의 중요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세계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IT기술 및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글로벌 시장환경 하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었고, 동시에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환경 하에서 각 국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분업화하며, 신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기존 사업의 규모도 확장하는 비용 효율적인 분업화 시대에 있었다.

그러나, 미중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들이 발생하며, 기존의 세계 분업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그간 산업별로 국가별 분업의 범위는 명확히 나눠져 있었으나, 무역전쟁,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는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영향에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되는 연계 산업 전반으로도 퍼져나가자 각 국은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국산화 추진, 소비자와 시장이 있는 곳에서 직접 생산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핵심부품산업, 핵심기술, 전략기술이 아니고, 수익성도 낮아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있던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인해 국가 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전 세계는 산업별로 공급망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훈련보고서에서 최근 무역환경 변화 사례를 최근에 있었던 주요 이슈별

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사례를 살펴본 다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무역의 정의 및 중요성

(1) 무역의 정의

무역이란 국가 간의 물건을 사고팔고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의 무역은 단순히 서로 간의 생산품을 교환하는데 그쳤으나, 현재의 무역은 보다 넓은 뜻에서 보이는 무역인 단순한 상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용역 같은 보이지 않는 무역, 그리고 자본, 금융의 이동까지도 무역에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이라고 함은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국내 산업에 대해 보호도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을 말하며, 반면에 보호무역이라 함은 국가가 외국의 무역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장려도 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무역의 세계적인 추세가 미중 무역분쟁 이전에는 국가별 분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자유무역에 가까웠다면,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는 글로벌 무역의 기조가 공급망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위해 여러 나라로 다양화하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핵심 기술은 국산화하며,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도 같이 하게 하는 등으로 보호무역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 무역의 역사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지중해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식민지 교역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역이라고 할 수 없다.

국제적인 무역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간의 교역이 이루어져야 이를 현대에서 말하는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말 고전적 자유무역주의가 활성화된 시기부터 지금까지가 진정한 무역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표1-1> 국제 무역체제 및 무역정책 사상의 전개

구분	시대	정책기조	역사적 배경	이론적배경	주도국
1단계	16~18C 중엽,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적보호 무역주의	근대국가 절대왕정	중금주의 무역차액론 산업보호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2단계	18C말~19중엽 산업자본주의	고전적 자유무역주의	산업혁명 산업 자본주의 교통의 혁명	중농주의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사상	영국 주도의 자유무역체제
3단계	19C 중엽 이후 산업자본주의 후기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경쟁격화 후발국 산업화	산업분화론 유치산업보호론	미국 독일
4단계	1870년대~ 2차 대전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적 보호무역주의	제국주의적 경쟁 세계대공황 세계대전	-	제국주의 열강
5단계	2차 대전~ 1960년대 수정자본주의	전후의 자유무역주의	국제협력 상실에 대한 반성 GATT, IMF	신자유주의론	Pax-Americana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체제)
6단계	1970년대 이후 복지자본주의	新 보호무역주의	비교우위 경기침체 정치경제적 요인	공정무역론 상호주의 신중상주의	선진국 중심의 보호주의
7단계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주의	경제 급성장 국제기구	지구촌화 : 교통/통신발달	선진국
8단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성장률 하락	자국의 고용 안정 우선	미국 중견 신흥국

출처: 국제경제관계의 정치경제론(노택환, 2014)

(3)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나라는 최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내 총생산(GDP)과 수출입을 비교하면 수출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무역의존도는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을 말하며, 수출의존도는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 수입의존도는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을 말한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찾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약 20%, 영국과 프랑스는 40%,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도 50%정도를 차지한다.

<표1-2>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단위 : %)

연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2011	44.30	41.84	86.14
2012	42.87	40.66	83.53
2013	40.83	37.62	78.45
2014	38.59	35.41	74.00
2015	35.95	29.79	65.74
2016	33.03	27.08	60.11
2017	35.34	29.48	64.82
2018	35.06	31.02	66.08
2019	32.84	30.49	63.33
2020	31.28	28.55	59.83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표1-3> 주요 국가별 무역의존도(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한국	60.11	64.82	66.08	63.33
일본	25.44	28.15	30.01	28.17
중국	32.78	33.39	33.34	32.05
미국	19.41	19.89	20.39	19.32
프랑스	42.41	43.96	44.45	44.43
독일	68.91	71.08	71.81	70.54
이탈리아	46.41	49.52	50.41	50.66
영국	36.06	38.53	38.44	37.6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러므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응하는 무역정책의 중요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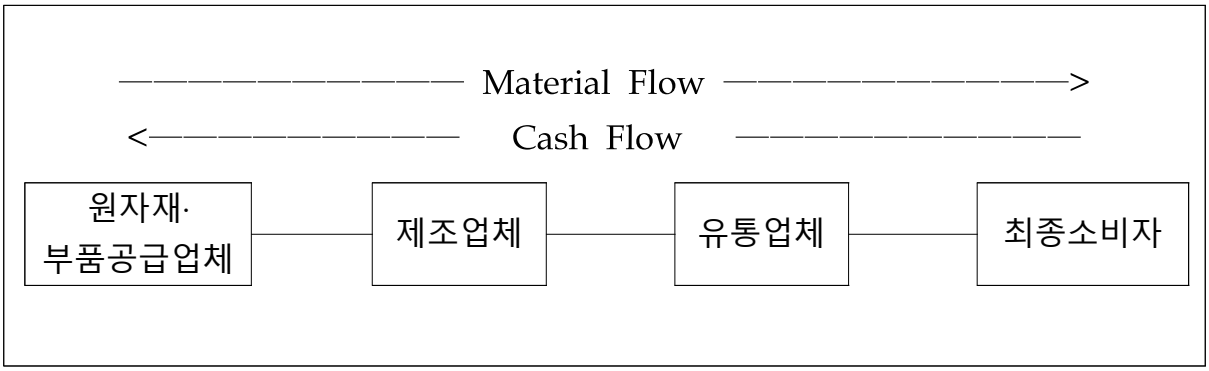
제2절 주요 개념

1. 공급망

공급망(supply chain)이란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에서부터 완제품을 최종 소비하는데 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가 이동하는 연결망을 말한다.

즉, 원재료를 획득하고, 획득된 이 원재료를 중간재나 최종재로 변환하고, 최종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조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트워크이다.

<표1-4> 공급망의 개념



이전의 공급망 관리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였다. 현재에 비해서 각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분업화하는 효율적인 분업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국가 간의 분쟁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보다는 신뢰성, 즉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 요소수 사태 등 상당 부분의 공급망 사태의 문제가 중국과 연관되어 일어났고 만약,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급망 현안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 요즘이다.

2. 리쇼어링

리쇼어링(re-shoring)이란 기업의 해외진출을 뜻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개념으로 낮은 생산비용, 저렴한 임금으로 인하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옮겼다가 해당 국가에서도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문제에 직면하여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개념이지만,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와 실업난이 발생하여 리쇼어링을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현재는 미중무역분쟁 등 국가 간의 분쟁사태,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부각에 따라 자국 내에 핵심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복원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3월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3년 6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입지·설비 보조금, 고용보조금, 세제 감면, 입지 지원, 정책사항 우대(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약 80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비슷한 개념으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라는 것이 있다. 니어쇼어링은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에 인접 국가로 아웃소싱하는 개념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추세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로 니어쇼어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자유무역

자유무역(free trade)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국내 산업에 대해 보호도 장려도 하지 않아 자유롭게 대외거

래를 하는 무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따라 각 국가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량은 극대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모든 나라의 이익은 커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이론일 뿐 실제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강대국의 이익은 커지고, 약소국은 계속 약소국으로 남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보호무역

보호무역(protective trade)이란 국가가 외국의 무역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장려도 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국가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보호무역을 약소국에서 주로 주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강대국에서도 자국 내 고용, 해당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일자리 확대,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강화, 공급망 이슈 등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보호무역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등으로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낮출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도 있으며,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R&D 등을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5.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제조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EUV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에칭가스), 불화폴리이미드(FPI)를 말한다.

당시 EUV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FPI)는 전 세계 생산의 90%를,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생산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품목들이었다.

EUV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 공정에 사용된다. 노광 공정이란 웨이퍼 위에 빛을 노출해서 회로를 인쇄하는 공정을 말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정에서 벨기에산 수입을 12배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 수입선을 다변화하였다.

불화폴리이미드는 OLED 패널을 제조 등에 활용되는 열안정성,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이다. 이 필름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정에서 대체소재를 개발하여 대체되었다. 대체소재인 Ultra Thin Glass를 채택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 수입을 사실상 제로로 전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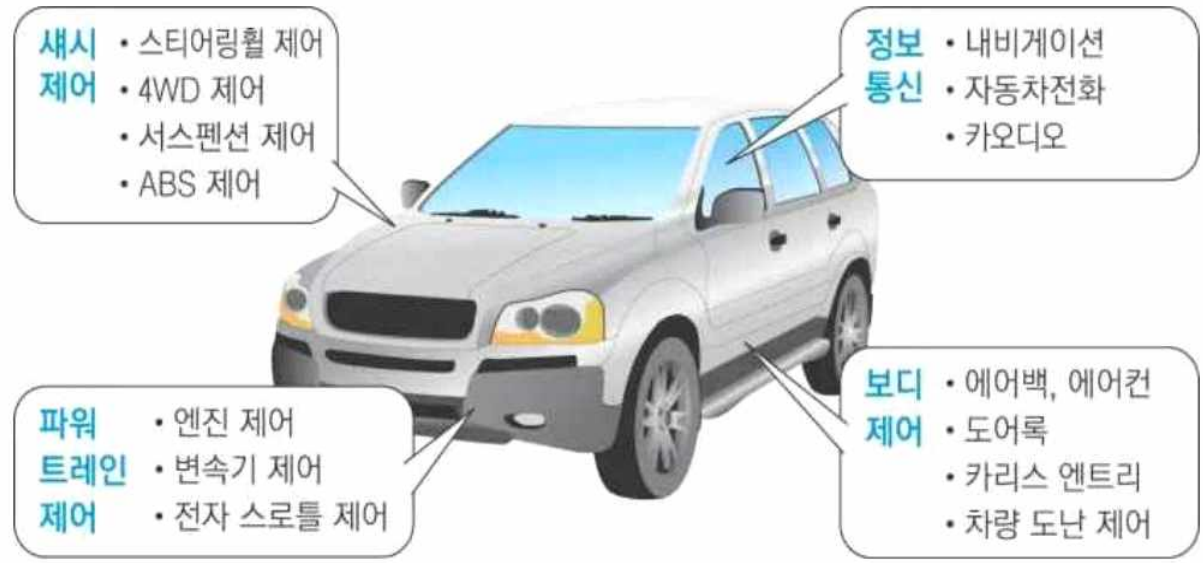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회로의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공정과 불순물을 씻어내는 세정공정에 활용된다. 식각공정이란 회로의 패턴 중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을 말하고 세정공정은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수백여 가지 공정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씻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정에서 불화수소는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업체를 찾아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일 수입액을 1/6으로 감소시켰다.

6.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거나 전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량에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

<그림 1-1> 차량용 반도체 용도별 구분



출처: 경향신문

<그림 1-2> 전자제어 시스템 구성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동차 내·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차량의 속도, 외부의 온도, 가해지는 압력 등)들을 측정하고, 엔진, 미션, 전자제어장치 등에 일부로 쓰인다. 차량용 반

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등에 사용된다.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가 정보의 저장에 사용되는 것과는 반대이다.

고전류를 출력하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에 쓰이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계통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이는 반도체 등 수많은 반도체가 자동차에 쓰이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유럽계 기업이 선두주자인데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7. 요소수

요소수는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를 화학반응을 통하여 질소로 환원시켜 대기오염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줄이는 요소의 수용액을 말한다.

<그림 1-3> 요소수

출처: 나무위키

디젤엔진 자체가 고온의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연 발화시켜 가솔린 엔진에 비해 연비가 뛰어나고 차량의 힘이 좋지만,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 좋지 않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는 인체에 매우 좋지 않은 물질로서 대기 중에 배출되면 비에 녹아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오존층까지 올라가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소수는 요소 약 33%, 증류수 약 67%의 혼합물이다. 요소수가 디젤 차량에 들어가 요소수는 암모니아로 바뀌고, 그 이후에 질소산화물을 만나 물과 질소로 분리된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럽의 경유차 배스가스 규제단계인 유로6에 맞추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를 활용한 SCR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게 되었다. 요소수가 이 SCR 방식에 쓰인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로6 기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SCR을 디젤차에 장착하였다.

요소수 제조의 핵심 원료인 요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요소수 공급이 필요한 차량이 디젤 승용차 약 130만대, 화물차 약 60만대인데 이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 차별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분석』(주용식, 2021), 『미중 무역전쟁 연구 :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김관옥, 2018),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제홍, 2020),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EU의 대응과 대미통상정책의 변화』(강유덕, 2019) 등의 연구를 검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연구와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주제(EU무역정책 등)와 관련된 연구내용을 분류하여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표 1-5>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제 목	연구내용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연구	주용식 (202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분석'	- 이론적 문제 제기 - 무역전쟁의 원인 -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제학적 원인 도축 - 근본적인 원인 도출 -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김관옥 (2018) '미중 무역전쟁 연구 :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 시진핑 정부의 무역정책 -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과정	-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도출 - 트럼프정부 보호무역정책 결정과정과 이전 정부의 차이점 도출
	박병광 (2019) '최근의 미·중 분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 미중 분쟁의 현황과 주요 쟁점 - 미중 마찰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	- 미중 무역분쟁의 현재상황과 미래전망 도출 -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현기순 (2021) '일대일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의 함의'	- 미중 무역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사회연결망 기법으로 분석	-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 커뮤니티 구조 분석
우리나라 무역정책 관련 연구	이제홍 (2020)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수출규제의 이론적 연구 -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한 수출규제 대응방안 도출	-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현황 분석 -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한 수출 규제 대응방안 도출
	김호건 (2021)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대응전략'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원인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영향과 대응	- 기업의 단기·중기·장기 전략 도출 - 국가별 대응방안 분석 및 전망 제시

<table>
<tr><td rowspan="2">기타 주제
관련 연구</td><td>강유덕 (2019)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EU의 대응과 대미통상정책의 변화’</td><td>- EU 통상정책 기본방향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EU 통상갈등
- EU의 대응방안</td><td>-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EU의 대응과 통상정책의 변화 추이 도출
- 이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td></tr>
<tr><td>윤성종 (2020)
‘EU 무역정책의 특징과 향후 전망’</td><td>- EU 무역정책의 특징
- EU 무역정책의 향후 전망</td><td>- EU 무역정책이 다루는 중심 의제 도출
- EU 무역정책의 향후 전망시 고려해야할 사항 제시</td></tr>
<tr><td colspan="2" rowspan="3">본 연구의 차별성</td><td colspan="2">기 선행된 연구는 특정 주제(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에 관한 연구내용으로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있음</td></tr>
<tr><td colspan="2">기 선행된 연구는 특정 이론을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계산된 내용으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안 제시에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음</td></tr>
<tr><td colspan="2">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 변화를 주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td></tr>
</table>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기 선행된 연구는 특정 주제(미중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에 대한 연구내용으로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특정 이론을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계산된 내용으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한정되어 있어 실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소 거리가 있어보인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제 2 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제 1 절 미중 무역전쟁

1.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와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시작되었다.

중국의 많은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조작 의혹, 외국기업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정치에 등판했을 때부터 기업가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 중 무역적자가 심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경계해왔다.

중국이 반격에 나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후, ‘18.7.10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10% 추가 관세를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분량에 대해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8월 23일과 9월 24일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견제를 이어갔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을 받아들임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피터 나바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소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무역안보론은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비록 세계의 역학관계에서는 동맹이더라도 무역에 있어서는 미국의 적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를 말한다. 단순히 말해서 특정 국가가 오랜 기간동안 다른 특정 국가에게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의 적과 같다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이라는 논리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세웠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논리를 이용하였다.

트럼프가 재임기간 동안 해왔던 발언과 정책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동안은 무역적자를 보면서까지 세계의 경제를 책임져왔는데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제부터는 무역흑자를 보는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도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공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실 이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므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표 2-1>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일시	대응 내용	
	미국	중국
‘18.7.6.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 부과	
‘18.7.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 부과
‘18.10.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19.1.16.	화웨이, ZTE 등 부품 금지 법안	

‘19.5.9일～10일간 무역협상 결렬		
‘19.5.13.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탑, 태블릿PC 등 포함	
‘19.5.15.	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19.5.17.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대량 취소
‘19.6.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연말까지 휴전 합의		
‘19.8.5.	휴전 합의 파기, 3,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19.8.6.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19.8.6.		국유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19.9.2.	중국에서 수입되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에 관세 부과	

출처: 나무위키

이후 5개월간 별다른 정전 없이 관세 부과 경쟁을 지속하던 두 나라는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의 합의점을 찾기로 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주요 쟁점인 해외 기업의 기술 강제이전 문제, 지식재산권의 미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진행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협상 중에도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의 부회장 겸 CFO를 체포하는 등 중국 기업을 견제하였다. 화웨이의 부회장은 유엔과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물품을 불법적으로 우회 수출한 혐의로 캐나다에서 12월 1일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에서는 화웨이의 부회장 겸 CFO의 체포로 캐나다 제품에 대한 불매운

동이 일어났고, 중국정부는 이에 미국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후, 이 갈등은 12월 11일 캐나다 법원이 화웨이의 부회장 겸 CFO를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2019년 1월 7~9일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였다. 무역협상은 뚜렷하게 진전된 성과는 없었으나, 무역전쟁 휴전 뒤에 처음 진행된 협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이후 4월 10일 미국과 중국은 협상 결과로 발표될 무역합의의 이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리면서 양국 간의 협상 타결이 가까이 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양국은 4월 30일~5월 1일까지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안이 5월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었다.

2019년 5월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중간 무역협상이 열렸으나, 협상 결과는 좋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투자를 위해 들어온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제한다는 점, 중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많은 비율로 지급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문서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5월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5월 13일, 6월 1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15일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서명의 효력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들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포함한다고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화웨이나 ZTE를 대표로 하는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들이 실제 목표였다. 미국은 화웨이가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백도어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놓아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정보를 빼앗고,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중국의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겨냥하였다는 분석이 다수였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중국의 기업에 각종 국가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반면에 외국 기업에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대신 중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해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16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거래제한기업 리스트에 화웨이를 올렸으며, 이 방침에 따라 구글은 화웨이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텔, 퀄컴 등)들은 반도체칩 공급을 중단하였다.

2019년 5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미 무역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류허 부총리와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하였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희토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안정적이면서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을 가진 광물을 말한다. 중국은 이전에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 분쟁 시에도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 중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지정하였고,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비판하였다. 천안문 사태란 중국 천안문에서 발생한 중국 당국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말하는데 천안문 사태 30주년 성명을 내면서 중국을

비판하였다.

미중 무역전쟁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지자 중국은 중국인들의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을 억제하였고, 미국 관광도 억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2016년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2017년 경제적 보복(화장품 불매, 한국 단체관광 억제)을 하였듯이 동일하게 미국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을 활용한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과열되던 미중 무역전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시작되고, 2019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간 협상이 아무런 진전 없이 마무리 되고, 협상 직후인 2019년 8월 1일 미국이 다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는 다시 과열되었다.

중국은 중국의 국가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시켰고, 11년 만에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였다.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출품 가격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을 2019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의 이유가 없으나,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였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3.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2019년 1월 10일~11일 미국과 중국은 미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다시 과열된 무역전쟁의 양상을 낮추어갔다. 이 협상은 2018년 7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약 15개월 만이었다.

이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 구매하기로 하였고, 미국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았고, 양국의 갈등의 핵심은 해결된 것이 없어 실질적으로 무역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다소 소강사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 2 절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1.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의 시작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EUV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에칭가스), 불화폴리이미드(FPI)에 대해 2019년 7월 4일부터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해당 조치를 실시한 이유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는 점을 들며,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7월 4일부터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하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당일,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2.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의 경과

일본은 8월 2일 우리의 국무회의인 각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화이트 국가, 비화이트 국가로 나뉘어 있던 관리분류체계를 A, B, C, D 4단계로 등급을 분류하였는데 기존의 화이트 국가는 A그룹, 비화이트 국가는 그룹 B, C, D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내용이었다. B그룹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터키, 에스토니아 등 1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B그룹은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들로 채워졌다.

<표 2-2> 일본 수출 상대국 관리분류체계

기존 백색국가	기존 비(非)백색국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6개국	한국, 터키, 에스토니아 등 16개국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요건 충족한 국가)	대만, 싱가포르 등 A·B·D 이외 국가	북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0개국
비민감품목 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특별 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개별허가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9년 8월 7일 일본은 8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8월 28일 이후 한국 수출을 할 때 기존 백색국가

에 적용되는 일반포괄허가는 허가되지 않으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만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B그룹이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일본 회사에 거래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다. 이 특정한 조건이라 함은 전력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 규정(CP)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CP기업이란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일본 경산성에 제출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능력을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한국 기업이 이 CP기업을 통해 전략물자를 수입한다면 특별 일반포괄허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심사 신청서류 2종, 처리 기간 1주일만으로 수출 허가가 되고 포괄허가 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을 때와 효과의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적 공격이라는 점을 알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2019년 7월 7~8일 이를 공식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14일에 의제로 들어갔고, 24일에는 실제로 의제로 논의가 되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경제적 공격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국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 정부는 WTO와 미국을 무대로 펼친 국제여론전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논리적으로 명확치 않은 입장을 바탕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WTO에 제소하여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기간(2~3년)이 필요하며, 혹 WTO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승소하여도 일본의 규제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질 지라도 WTO 제소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보복 목적이라고 주장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세계적으로 재확인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1일 태국 방콕,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 외무상은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할 뿐이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에 2019년 8월 말에 만료될 예정인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한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지소미아는 2019년 8월 말까지 어느 한 국가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우리도 일본과 동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응하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 분류에서 일본을 빼내기로 하였다. 전략물자 수출 지역 분류에서 일본을 빼내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넣는다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약 1,700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절차가 복잡하게 하여 우리의 주요 대일 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물자의 일본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2019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적으로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은 1년 내에, 장기적으로 자립화에 시간이 걸리는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이를 위해 공급선 확보, R&D 등을 통한 자체 개발, 해외 기업 M&A 등 세 갈래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급선 확보는 단기적으로 수급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단기 20개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품목의 공급을 1년 안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중국, EU, 러시아 등에 대체수입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최저 0%까지 낮추었다.

대규모 R&D 투자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80개 품목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핵심품목 중 국내에서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사용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22일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현재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는 등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4일 실시한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경제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GATT 제1조, 제10조, 제11조 등)되는 조치라며, WTO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제 3 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시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19년 12월부터 퍼져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2019년 12월 12일,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첫 환자가 생겨나고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다고 보고되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외부로 퍼지기 시작해 2020년 3월 말까지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다소 늦었지만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범유행전염병, 즉, 팬데믹임을 선언했다.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 전염병의 공식 명칭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로 확정했으며, 한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줄여서 코로나 19)로 번역했다. 확산 초기에는 WHO에서 임시로 novel CoronaVirus(2019-nCoV)라고 부르며 발병 의심 지역명이 들어간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2015년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이나 스페인 독감 등 병명에 지역명을 넣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한편, WHO의 권고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중국 책임론과 관련지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경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전 세계는 앞 다투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EU는 27개국 정상간 합의를 통해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에서 EU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을 금지하였고,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일본 등 100개가 넘는 국가·지역에서 국경을 봉쇄하였다.

국경을 봉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기 직전까지 확진자는 6,700만명이 넘어갔고,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고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접종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고, 2022년 2월 19일 기준으로 확진자수는 423,564,041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영향

코로나19가 다른 위기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이점은 각 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경봉쇄, 입국제한 등의 억제조치를 오랫동안 시행하여 글로벌 인적교류 등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난이 발생하였다. 마스크 주재료의 생산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집중된 탓으로 공급량을 쉽게 늘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마스크 하루 평균 생산량은 4,000만개 수준이며, 그 중 2,000만개는 중국에서 생산된다. 즉, 전 세계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5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마스크 부족난이 발생하자 자국에서도 사용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프랑스, 체코, 대만, 인도 등 각 국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였다.

2020년 3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EU 27개 회원국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긴급 회동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일부 회원국의 마스크 등 각종 의료장비 수출 금지조치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최소한 EU 역내시장에서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이 제한없이 오고가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체코 등 회원국들은 이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아비규환 상태에 있었던 이탈리아 정부의 마스크 등의 의료물품 지원 요청에 지원 의사를 밝힌 EU회원국은 거의 없었다. 다른 EU회원국도 마스크 등의 의료물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였고, 2020년 2월 7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추진하여 매점매석 등을 단속하고, 마스크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대란 직후부터 3월 중순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합동으로 33개국 113개 부직포 제조업체를 방문·유선 조사하여 마스크의 주재료 수입을 다변화하였다.

2020년 2월,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품수급 차질로 울산5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문제의 부품은 중국에서 공급 받는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하나였는데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장폐쇄,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가서 생산에 차질을 빚자 부품 공급이 끊기자, 현대, 기아, 쌍용, GM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줄줄이 휴업하는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의 여러 전기장치에 연결되는 배선 뭉치로 케이블 절단, 피복 압착, 조립, 시험검사 등 노동집약적 공정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자동화 난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제조사는 한국이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옮겨 공장이 중국에 있어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장 가동이 멈추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경신, 티에이치엔), 동남아 공장을 확보하고, 중국 공장에서도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필요한 물량 조달을 가능케 하여 2020년 2월 11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제 4 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1.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의 시작

반도체 대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트럼프의 SMIC 제재로 인해 2020년 말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태를 말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거나 전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자동차 내외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차량 속도, 외부 온도 등)들을 측정하고, 엔진, 미션, 전자제어장치 등에 일부로 들어간다. 차량용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등에 사용된다.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가 정보의 저장에 사용되는 것과는 반대이다.

하나의 자동차에는 수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사용된다. 가솔린, 디젤 등의 내연기관 차량에는 평균적으로 약 300개가 사용되고, 정보의 처리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차에는 약 1,000개가 사용되며, 각종 센서들에 의해 도로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연산에 의해 자율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에는 현재의 전기차의 2배가 넘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차량은 한번 구매하면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강한 충격, 변화되는 온도 등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된다. 차량은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안전성

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용 반도체나 컴퓨터, 핸드폰에 쓰이는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내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내구성과 품질 수준은 기존의 선두업체가 아닌 후발주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완성차 업체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후발업체에 의해 차량용 반도체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양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오랜 기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설령 시장에 나오더라도 수요기업인 완성차 업체는 리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진출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반도체는 대량생산을 하는 품목인데 반해, 비메모리반도체인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품목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이므로, 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소수의 업체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종류마다 선두기업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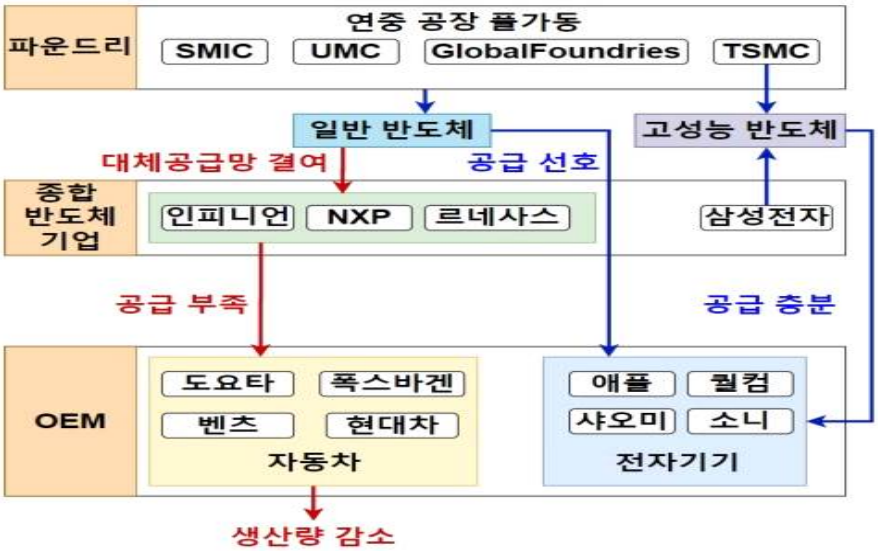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핸드폰 등 타 용도의 반도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수익성이 낮다.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약 2달러 정도로 차량 1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의 총 가격은 자동차 가격과 비교하면 2~3%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 3~4천만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 이외에는 수익성이 나기 힘들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수급난은 완성차 업계와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급 예상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완성차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차량용 반도체의 주문을 줄였고,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용 반도체의 생산에 주력했다. 그리고 2020년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갔고, 국내 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차량 구매가 늘어나고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해짐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20년 말에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차량 이동량을 회복한 상태였다.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제재 중 SMIC에 대한 제재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TSMC와는 달리 저가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SMIC은 제재를 받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그림 2-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



출처: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현황 및 강화방안(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차량용 반도체 대란 기간 동안 미국의 GM은 북미지역에서만 최소 6곳의 공장을 가동중단하였다.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GM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 차량 출고 대기기간이 인기 차종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기해야 하며, 기현상으로 신차 출고가격보다 바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길지 않는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완성차 업체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는 모델을 선택하면 가격을 상당 부분 할인해주기도 하였다. 말 그대로 반도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도요타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어려움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대비를 잘해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야 피해 정도가 덜하다.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모델이 다양하지 않고, 설계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의 반도체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가 타 업체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한다.

제 5 절 요소수 공급 대란

요소수는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를 화학반응을 통하여 질소로 환원시켜 대기오염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줄이는 요소의 수용액을 말한다.

디젤 엔진 자체가 고온의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연 발화를 시켜 가솔린 엔진이 비해 연비가 뛰어나고 차량의 힘이 좋지만, 환경적인 문제에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 좋지 않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는 인체에 매우 좋지 않은 물질로서 대기 중에 배출되면 비에 녹아 산성비를 내리게도 하고, 오존층까지 올라가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디젤 차량에서 요소수는 암모니아로 바뀌고 그 이후 질소산화물을 만나 물과 질소로 분리된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환경규제로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켜 나갔다. 유럽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인 유로6에서는 이전의 유로5보다 질소산화물을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 배출된 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로6에 맞추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를 활용한 SCR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게 되었다. 요소수가 이 SCR 방식에 쓰인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로6 기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SCR을 디젤차에 장착하였다.

요소수는 요소 약 33%, 증류수 약 67%의 혼합물이다. 요소수 제조의 핵심 원료인 요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요소수 공급이 필요한 차량이 디젤 승용차 약 130만대, 화물차 약 60만대인데 이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2021년 10월, 우리나라와 유럽 전 지역에서 요소수 물량 부족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 때문에 발생하였다. 호주는 미국 주도의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이어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에도 가입하였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였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중국의 석탄 수급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석탄 부족 문제로 인해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자 중국은 석탄을 우선적으로 발전소로 보내버렸고, 기존에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만들던 요소를 제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디젤 차량에 SCR장치 장착을 법제화하면서 그 이후

에 출고된 디젤 차량은 모두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필수적인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청소차량, 물류 차량 등에도 SCR장치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제 3 장 해외 주요국 무역정책 현황

제 1 절 미국의 무역정책 현황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시작된 미국발 보호무역정책은 전 세계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기초한 미국의 기 체결된 무역협정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취임 직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지시하였으며, 다자무역체계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2014년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 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2020년 명목 GDP 상으로 미국의 20.9조 달러에 이어 중국은 14.7조 달러로 일본의 5조 달러보다 약 3배가 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에 국가 안보 위험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서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하자는 내용의 대중 통상전략을 2021년 10월 5일 공개하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통상정책, 산업정책, 외교정책 등 다방면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대중 강경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급망 이슈에 있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일자리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추

진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자 공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전 정부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개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쇼어링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설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실적을 거두기는 쉽지 않으나, 중장기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리쇼어링 이외에도 근처에 생산국을 두는 니어쇼어링과 중국 외 저비용 생산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병행 추진하는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제 2 절 중국의 무역정책 현황

과거 중국은 임금이 낮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해왔었고, 낮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설립된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으로부터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 많은 수출기업들을 육성하였다. 수출기업을 통해 2014년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 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을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중국이 수출주도형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정작 핵심기술은 발전하지 못하고 외국의 기술들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생겨났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7대 과학기술 선도 분야(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 임상의학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탐사), 8대 제조업 핵심 경쟁력 분야(고급 신소재, 주요 기술장비, 지능형 제조로

봇, 항공엔진, 베이더우항법시스템,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의료기기·신약, 농업기계장비)를 명시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미중 분쟁,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찾고 있고, 중국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 인프라 발전,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중국 내 공급망이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 내 공급망이 탄탄한 편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동안 중국은 UN이 지정한 제조업 분류 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제조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분류기준으로 41개의 중분류, 666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전체 제조분야를 중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여, 중국 내에서 완전한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는 전 세계 제1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의 강점으로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중국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패권국가가 되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단순히 무역·통상 분쟁이 아니라 패권국가와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은 대외무역정책 기조를 대외개방확대, 국제협력 및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통한 통관 및 생산협력, 투자개방, 무역개방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반대로 자유무역정책 기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유무역질서를 강조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육성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 3 절 EU의 무역정책 현황

EU의 무역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다자간 협상을 옹호하고, WTO 원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제무역의 규제조치 완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등 자유무역을 추구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EU 회원국 간의 내부시장은 장벽이 없기 때문에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EU 회원국 간에는 공동의 상품, 서비스, 농업 등의 정책, 규제 수단이 동일하여 내부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U는 하나의 거대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내부시장을 넘어서서 제3국에 대해서도 EU라는 하나의 거대시장으로의 접근이라는 유인책을 활용하여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기준, 노동정책,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등 비무역적인 가치를 따르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 무역 관련 제한조치를 부과하고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방법 등이 있다.

EU의 무역정책은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의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등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나타난 미국발 보호무역정책으로 EU의 무역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영국은 EU를 탈퇴하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지지를 얻었으며, EU 내에서 다자간 협상을 옹호하는 다자주의는 약화되고, 미중간, 미·EU간 무역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자 EU는 무역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EU 역내시장에서의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역내시장의 양적 확장보다는 기존의 역내시장 간의 결속을 강화시

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등 EU의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셀의 95%를 역외시장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왔으나, 2030년까지 유럽 역내에 배터리셀 공장을 6곳 세워 배터리셀을 직접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르노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분을 늘이고, 한국·중국 공장의 생산분을 줄여서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제 4 장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사례

제 1 절 미중 무역전쟁

정부는 2018년 7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의 대중 수입에 대해 10%의 부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대미 수입에 대해 600억 달러 관세부과로 맞대응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1. 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영향 분석, 업종별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산업연구원과 각 업종별 협회, 단체에게 세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에는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요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바이어들의 동향 파악 등을 요청하였다.

2.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마케팅, FTA 네트워크, 산업협력 등을 확대하여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지역, 신북방지역 등으로의 수출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그 일환으로 무역사절단, 해외 현지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품목군 육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어렵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 반도체, OLED, 배터리 등 고부가화학산업 등 새로운 수출품목군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수출금융 지원

2018년 9월부터 무역보험공사는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와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등 기 시행 중인 보증한도우대,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2019년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역금융 5,000억 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하였다.

제 2 절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특정 국가에 대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하며,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일본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터)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였다.

미국, 중국, EU 등 일본을 대체할 수입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수입국 발굴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지원토록 하였다. 그리고 코트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급업체를 발굴하려 노력하였다.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산화시키기 위해 R&D 예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불화수소는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업체를 찾아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일 수입액을 1/6으로 감소시켰고,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인

Ultra Thin Glass를 채택하는 방법을 통해 대일 수입을 사실상 0으로 전환시켰다. EUV레지스터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벨기에산 수입을 12배 확대하는 등 대일 의존도를 50% 이하로 감소시켰다.

<그림 4-1> 일본 규제 3대 품목 공급망 안정 달성

출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산업통상자원부, 2021)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짧은 기간 동안 대일 의존도(HS코드 기준)를 31.4 → 24.9%로 약 6.5% 감소시켰다.

2.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수요 대기업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그동안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실제 생산라인을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개방하여 신규 기술을 검증 받도록 하여 대체소재의 적합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양산화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생산라인의 신·증설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시급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상용화 전단계의 품목은 기존 신뢰성 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용화 직전의 품목 군들은 약 6개월의 양산평가를 지원하였다.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보세구역 등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고, 기존 15일 저장할 수 있던 기간을 필요기간까지로 연장하였다. 반입과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였고,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감면심사를 완료하게 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소요기간도 줄여주었다.

또한, 핵심품목들 중에서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어렵거나 하는 분야는 2.5조원 이상의 M&A 인수자금을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하였고,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인수금융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컨설팅, 사후통합관리 등 종합 지원하도록 하였다.

핵심 전력품목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직접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입대료를 최대 50년 무상 제공하도록 하였다.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구의 규모도 대규모이므로, 소부장 R&D에 예산을 증액하였다.

3.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 간의 수평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업 간의 협력모델에 여러 지원을 추진하였다.

<표 4-1> 협력모델 예시

<table>
<tr><th colspan="2">수직적 협력(수요-공급 기업 간)</th><th colspan="2">수평적 협력(수요기업 간)</th></tr>
<tr><td>유형 A
(협동
연구개발형)</td><td>기술로드맵 공유 R&D
→ 기술활용 R&D</td><td>유형 C
(공동 투자형)</td><td>협력사 공유
공동 개발·시설투자</td></tr>
<tr><td colspan="2">【지원】 기술로드맵 공유, R&D자금, 공공조달, 판로지원, 계열사간 거래기준 명확화</td><td colspan="2">【지원】 기술이전→협력사,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임대 전용산단 우선입주, 법인세 감면</td></tr>
<tr><td>유형 B
(공급망 연계형)</td><td>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td><td>유형 D
(공동재고확보형)</td><td>공동구매, 보관</td></tr>
<tr><td colspan="2">【지원】 시설투자 융자, 실증·양산 지원, 지방세 감면, 산단 물량 우선배정</td><td colspan="2">【지원】 해외구매 컨설팅, 해외 물류·보관 지원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td></tr>
</table>

<지원예시> * (입지) 공급-수요기업이 공동산단 조성시 수도권 우선배정
* (세제) 수요기업 공동으로 공급기업에 R&D 및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약 5%) 등
* (규제특례) 공동R&D에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사전인가 등

출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정부부처 합동, 2019)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사업을 통해 20년 말까지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4-2>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사업 주요성과사례

출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산업통상자원부, 2021)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하여 1대 多로 매칭하여 기술 확보를 위해 밀착 지원하였고, 이종부문간 융합형 기술지원, 신뢰성 강화 지원, 기술 매칭, 애로기술 해소, 기술도입, 이전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연구소, 대학의 전문 인력을 산업계로 파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 마스크 수급

마스크는 평상시에는 1일 생산량 200~300만개로도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었고, 미세먼지 기간인 12월에서 그 다음해 4월 정도까지만 주로 쓰이는 특정 기간 동안만 팔리는 제품으로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클 수가 없고,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영세기업만이 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제품이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의 주재료의 생산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는 물량 부족현상이 일어나자 세계 각국들은 앞 다투어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5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였고,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3월 중순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합동으로 33개국 113개 부직포 제조업체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하여 마스크의 주재료 수입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확보된 마스크 주재료를 국내 제조업체들에 보급해주어 마스크의 1일 생산규모를 코로나 발생 이전 200~300만 개에서 1,000만개 수준으로 늘일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생산량이 증대된 마스크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구조를 투명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와이어링 하네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의 전자장치들을 연결하는 전선의 다발을 말한다.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익도 많이 나지 않아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제품의 생산을 중국에 그동안 의존해왔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 공장 자체를 옮겨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의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

하였고, 중국의 춘절 명절 연휴도 겹쳐버리는 바람에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쌍용, GM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공장이 연이어 멈춰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공장에는 생산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숙련공들을 배치하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공장에서도 국내 공급용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공급량의 약 80%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라, 경신, 티에이치엔 등 국내 공장도 증산하였다. 이는 결국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급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물량을 일부 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제 4 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2021년 상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발생하자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3월 국제사회 협력강화, 반도체 신속통관 등의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1. 해외 긴급조달 지원

차량용 반도체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주요 해외정부, 반도체 생산기업, 협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도체 물량 부족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완성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여, 2021년 2월 17일부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하여 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하였고,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국내 기업들에서는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발생할 때, 코로나19에 준하여 긴급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예를 들어 원부자재는 신속하게 통관시켜주고, 기업에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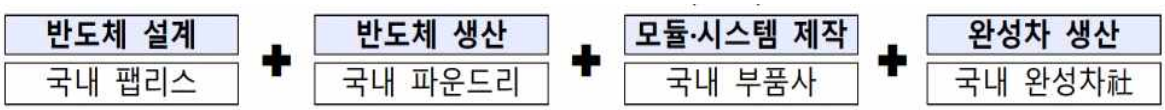
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항공운송료도 특례를 주어 단가를 낮추어 주었다. 또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을 하게 되면 14일 격리가 필수였는데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이 14일 격리로 인하여 국내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인들을 지원하였다.

2.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발굴

단기간에 기존 차량용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성능검사, 인증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였다.

일본 수출 규제 시에 기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에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별도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해주었고, 완성차 업체와 파운드리, 팹리스 등의 반도체 업체가 동참하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인력·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였다.

<그림 4-3> 협력모델 참여 주체(예시)



출처: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정부부처 합동, 2021)

3. 핵심 반도체 개발

차량용 반도체는 개발 난이도가 높은 품목이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은 품목군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정투자에 기본적으로 수조원이 투자되나, 수요량이 휴대폰·PC 등에 쓰이는 다른 반도체보다 적기 때문에 수익성은 부족하고, 사람이

탑승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15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받을 수 있는 가혹한 온도·습도·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통신, 이미지센서 등의 기존 반도체를 발굴하고, 성능 개선을 지원하며, R&D사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등 관련 R&D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부품 자립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시설, 시험장비 등을 올해부터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구축된 인프라는 팹리스의 공동활용과 연구를 위해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제 5 절 요소수 공급 대란

2021년 12월 중국의 요소수출검사 의무화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2021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주제로 국내의 요소 수급의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이후, 국내 요소 수급의 상황과 이 의무화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긴급대책 3가지를 제시하였다.

1. 중국에 수출제한 완화 요청

요소 수입이 조속한 시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량에 대해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는 협조를 구하고, 우리 수요기업별로 필요한 물량을 파악하여 수출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수입처 다변화

중국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실제로 2021년 11월 11일 산업부와 코트라가 해외의 요소와 요소수 물량이 있는 곳을 살펴보던 중, 현대글로비스 호주 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하던 호주의 요소 및 요소수 생산기업 정보를 획득하고, 현지계약을 빠르게 맺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군 수송기를 통해서 차량용 요소수 2만 7천리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산업용 요소, 차량용으로 전환

단기적으로 긴급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청소차량, 물류차량 등에 필요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수입되는 요소의 산업용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 총 55만톤 중 60%를 차지할 만큼 상당수이다.

그러나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는 성분이 달라 정제과정을 거친다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제과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제 5 장 무역정책 방향 제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와 중요 개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무역환경에 변화를 주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사건들에 대해 정부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사례조사를 하였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 요소수 대란 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각 국가는 그 국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만 잘한다면 기존에 구축된 공급망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등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급망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새판 짜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보다 좀 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망 연대 파트너십이다. 핵심 자원 매장지와 소재·부품·장비 선진국과 파트너십을 맺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왔을 때 단기간의 혼란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산화와 리쇼어링이다. 기존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국내에서 중국으로 대거 생산 공장을 옮기는 것이 대다수 기업들의 추세였다. 국내에 생산 공장이 없으니 일본의 수출규제 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문제,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문제, 요소수 공급 대란 때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체 수입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으로 인해 생산 공장이 근처에 있다면 기존 공장라인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수출시장 다변화이다.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크게 입는 경향이 있었다. 수출마케팅, 산업협력 등을 확대하여 신남방·신북방지역 등 기존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전시

회나 무역사절단도 유망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망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출을 잘 하지 않던 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망시장은 모두에게나 유망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비유망시장도 진출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싶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할지 알기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도 다수이다.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진출방법을 알려주는 사업들도 확대해야 하며, 해외 현지 유통망에 입점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코트라 무역관에서 수출기업에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해소 등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새로운 유망산업 육성이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 국가들이 추격하기 어렵고 통상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 OLED, 배터리 등의 고부가 화학산업,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산업들이 이러한 산업이다.

품목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개발, 실증화사업, 상용화 지원 등 R&D를 확대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무역금융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가지급,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제시한 무역정책 방향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유망산업과 수출품목군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의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전황수 외 2인. (2021).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용식. (202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 분석

홍서희 외 1인. (2022).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및 영향 평가, 국제금융센터

전은경. (2018).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강유덕. (2019)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EU의 대응과 대미통상정책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관옥. (2018).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병광. (2019). 최근의 미·중 분쟁과 우리의 대응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현기순. (2021). 일대일로와 미·중 무역 분쟁,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윤성종. (2020). EU 무역정책의 특징과 향후 전망, 청주대학교

장영욱 외 1인(2021). EU 신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성창훈. (2020).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불안과 정부 대응, 기획재정부

김호건. (2021).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대응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이제홍. (2020).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노택환. (2014). 국제경제관계의 정치경제론

산업통상자원부. (202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2020).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18) 산업부, 미국·중국 통상문제 본격대응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9.20) 개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개최 (보도자료)

2. 인터넷

미국-중국 무역 전쟁 – 나무위키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뉴시스. (2021). 요소수는 시작…커지는 차이나 공급망리스크